


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 | | | |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 | 보도 | 2017.5.2.(화) 배포시 | 배포 | 2017.5.2.(화) | |
| 책 임 자 | 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 | | 담 당 자 | 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2) | |

제 목 : 「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무회의 통과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에서 발표한 과제를 끝까지 차질없이 추진

- 5.2일(화), 「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
-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'15.10월에 발표한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(15.10월)」을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한 것임
 -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'15.11월~'16.4월중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였고,
 - '17.5.2일, 국무회의에서 「보험업법 개정안」이 통과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
-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'자율과 경쟁'을 촉진하여 그 혜택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
 - ① (자산운용 자율성 제고) 외화자산·부동산·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
 - * 외환(총자산의 30%), 파생상품(총자산의 6%), 부동산(총자산 15%)
 - ② (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) 벤처캐피탈, 리츠, SOC 투융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'사전신고제'를 '사후보고제'로 전환
 - ③ (보험상품 자율화 확대)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(방카상품)를 폐지하고, '원칙적 자율판매 + 예외적 신고·사후감독' 원칙을 명확화
 - ④ (보험상품 이해도 제고)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'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' 신설
 - ⑤ (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의무 실효성 제고)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,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1. 개정배경 및 그간의 경과

- '15.10월,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을 발표하고 계획된 일정 ①하위규정 개정 → ②법률개정에 따라 차근차근 개혁 추진
 - 보험산업에 '자율'과 '혁신', '경쟁'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기간 하위규정에서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우선 개선('15.11월~'16.4월)
- 당초 시행령·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대부분의 조치사항은 '15.11월, '16.4.1일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완료
 - (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) 하위규정에 열거된 상품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, 복잡한 상품 설계기준 완화('16.4.1 개정 완료)
 - (상품가격 자율화 및 공시 강화) 표준이율 폐지, 보험요율 자율성 확대('16.1.1 시행), '보험다모아' 출범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('15.11.30)
 - (새로운 환경에 대응)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, 기업성 보험 요율 자유화,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('16.4.1 개정 완료)
-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*에 대해서는 '16.6.28일~8.8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
 - * 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 법률 명확화,
 - ② 외환, 파생상품,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,
 - ③ PEF, 리츠 등 투자형 자회사 사전 신고제 완화 등
- '16.11월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, 17.4.23일,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(4.27일), 국무회의(5.2일) 통과

⇒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서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

2.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

■ 보험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

1.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

- (현행) 보험업법상 부동산, 외국환, 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적·사전적 한도 규제로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 제약

* 외국환(총자산의 30%), 파생상품(총자산의 6%), 부동산(총자산 15%)

- EU, 호주, 영국,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 폐지, 지급여력제도 등을 통해 사후 건전성 감독
- (개선)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
 -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(Risk Based Capital)의 신용 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
 - * '17.5월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특정자산 쏠림 리스크에 대비하여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 마련 예정
 -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 및 은행법·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존치

<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폐지 현황 >

| 현 행 | 개정안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동일 개인·법인 신용공여 : 총자산 3% ■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·주식 소유 : 총자산 7% ■ 동일 차주 신용공여+채권·주식 소유 : 총자산 12% ■ 동일 개인·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: 총자산 20% ■ 대주주·자회사 신용공여 : min(총자산 2%, 자기자본 40%) ■ 대주주·자회사 주식·채권 : min(총자산 3%, 자기자본 60%) ■ 자회사 신용공여 : 자기자본 10% ■ 부동산 : 총자산 15% ■ 외국환 : 총자산 30% ■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: 총자산 6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(존치) ■ 폐지 ■ 폐지 ■ 폐지 |

2.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

- (현행) 보험회사의 모든 자회사* 소유시 금융위 승인·사전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 발생

*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% 소유시 자회사로 간주

- 특히, SOC투자, 벤처캐피탈,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(15%이상 지분)에 대해서도 사전신고토록 하여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

- (개선)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면제

- (사후보고) 벤처캐피탈, 부동산 투자회사, SOC투자회사 회사는 투자 목적에서 보유하는 수단(Vehicle)이므로 사후보고로 완화

- (신고·보고 불요) 금융회사가 대주주 요건을 심사받고 설립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별도 신고절차 면제*

* 금융회사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시 보험업법상 별도의 자회사 승인·신고 절차 면제 → 금융위·원 부서관 협조로 One-stop 심사

- (자회사 요건은 충족 필요) 절차 간소화 시에도 자회사 소유시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*은 지속 충족해야 함

* 보험회사 재무건전성, 자회사의 재무상태 적정성, 자산운용한도 충족

3.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

- (현행) '16.4.1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으나,

- 아직, 법률상 불필요한 사전신고 의무가 남아 있고, 법문언상 '사전신고'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'사후감독 대상'도 다소 광범위하게 규율되어 있어 법 - 현실간 괴리가 발생

- (개선)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*를 폐지하는 한편, 「자율판매 + 예외적 신고** 또는 사후감독」의 원칙을 명확화

*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

**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, ②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

⇒ 로드맵 시행 이전(14년 기준)에는 보험회사가 약 8,100개 상품 중에서 1,584건을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나,

-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'16년 중에는 339건을 신고하였고,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서 약 300건 내외 수준(↓10%)까지 감소할 전망

4. 경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

- (현행)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등을 받은 경영업무,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도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

- (개선)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성이 낮은 경영·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 폐지

- (경영업무)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·허가·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경영업무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

- (부수업무)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

2. 보험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

1.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

- (현행)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* 등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등 모집인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중복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

* 실손의료보험은 다수 보험이 체결되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회사간 비례보상

*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 추이 : (15.4말) 23.3만명 → (16년말) 14.4만명

- 그러나,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

- (개선)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

- 보험회사,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 등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*

* 보험회사 5천만원, 보험회사 임직원 2천만원, 모집종사자 1천만원 한도

2.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

- (현행)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중

<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>

- 시행기관 : 보험개발원, ■ 평가주기 : 연 2회
- 평가주체 : 유관기관 장 등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9명
 - 금감원장(2명), 한국소비자원 長(2명), 보험개발원장(1명) 추천 보험소비자 5명
 - 생손보험회 長 추천 모집종사자(2명), 보험연구원장 추천 법률전문가(1명), 보험개발원장 추천 보험 전문가(1명) 등
- 기능 :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권고

- 그러나, 실제 소비자는 보험상품 내용 확인 및 가입여부 판단을 보험약관 보다는 권유 단계에서 제공받는 보험 안내자료*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

* 보험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상품 관련 자료로서, ①핵심 상품 설명서, ②상품요약서, ③변액보험운용설명서, ④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을 의미

- (개선)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

-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, 상품요약서,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

3.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

- (현행) 현행 법령상 보험회사는 他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, 사전*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

*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

- 그러나, 다수 보험계약자들은 이 공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, 계약이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

※ 계약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의 계약자 총수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 이전 不可

- 특히, 보험상품은 만기가 장기인 상품이 많고, 보험금 청구, 상담 등 유지·관리 측면에서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

- (개선) 공고뿐만 아니라 이메일, 휴대폰 문자, 우편발송 등의 수단(시행령)을 통해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토록 의무 신설

-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·관리하는 보험회사가 변경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의제기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

■ 보험회사의 투명성 강화 등 그간의 미비점 개선

1.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

- (현행)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제의 건전성 확보에는 미흡

- 특히,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, 감독기준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다수

* '15년말 현재,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·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62개(약 81.5%)

- 이에 따라 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재무건전성 감독·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필요

- (개선) 금융위(금감원)와 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 마련

-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-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2.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검증 의무화

- (현행) IFRS17 2단계 시행('21년 예정)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

- 책임준비금(부채) 시가평가 제도 등은 미래 금리예측 기법 등 복잡한 계량 기법이 적용된 회계처리 기준임

-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

- (개선)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보험계리업자* 등을 통해 검증받도록 의무화

* 외부계리업자 현황 : 보험개발원, 법인 계리업자(15개), 개인 계리사업자(6개)

- 보험회사의 자산규모, 보험회사별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화 대상을 확정할 계획(시행령 개정 사항)

3. 외국 보험회사 관련 미비점 개선

- ☐ (현행)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영 단절,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소지
 -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새롭게 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에 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*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
 - *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, 계약이전 및 신설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시 까지
 -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, 기존 계약자들도 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
- ☐ (개선)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등과 같이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新계약 체결을 허용

3. 향후 계획

- ☐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중 국회 제출
- ☐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